

제 공 일	2018. 5. 14(월)	
보 도 일	2018. 5. 14(월) 이후	
사 진 유 무	사진없음	
제 공 부 서		
담 당 자 및 문 의 처	조 성 박사	(일반)041-840-1230 (H. P) 010-8848-7084

보 도 자 료

6·13 지방선거 재난안전분야 정책공약 제안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와 충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가위기관리학회, 이재민사랑본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원들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정책공약을 제공한다.

반복되는 국가적 대형참사와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재난관리환경에 지방자치단체가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체장 및 의원 후보들이 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재난관리 연구기관과 학회 및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위한 재난안전분야의 정책공약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공약은 재난안전을 위한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중심, 대비 중심, 현장 중심, 사람 중심, 실천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5개 분야로 나누어 모두 25개 대안을 제시했다.

오늘 공개되는 정책공약은 전국의 지방선거 출마 자치단체장 및 의원 후보자가 정당과 무관하게 누구나 사용가능하다. 공약개발에 참여한 학계 인사는 본 공약을 각 지역의 여건과 환경 및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주민들이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분야 정책공약

1.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재난에 대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안전의 확실한 업무 주체로 나서서 실질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위임사무 이외에 주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역량있는 재난관리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난관리 감수성을 높이고 구성원이 문제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을 활성화 해야 한다.

■ 세부 정책대안(공약 예시)

- ▶광역단체장 위기관리 보좌관 직제 신설·운영
-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발주 시 안전관리 미이행 기업 윈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신설
- ▶전문가 참여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재난안전 연구·조사 및 위험 특성 분석

2. 대비 중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가장 바람직한 재난관리는 사후 대응이나 복구보다 사전에 재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과 실제 재난 발생 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대비가 더욱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산업, 인프라 등을 감안하여 도시, 농·어촌, 연안 지역의 재난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예방, 대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는 민간 자율에 의한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시장(market)을 형성하여 재난안전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세부 정책대안(공약 예시)

- ▶저수지, 댐, 원자력 등 위험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
-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인적, 물적, 장비 자원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재난안전 산업화 위한 광역 시·도 차원의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 ▶기업 위기대응실무매뉴얼,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작성 및 교육·훈련 실시 지원
- ▶재난 잔해물, 파손 구조물 등에 대한 제거 및 복구 산업 육성

3. 현장 중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 활동의 성패는 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의 확산을 방지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자연재난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활동의 통합·조정·지원은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 된다. 언제 발생하지 모르는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난 피해 현장 관리를 위한 역량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세부 정책대안(공약 예시)

- ▶현장통제관 육성을 위한 간부공무원 교육·훈련 실시
- ▶지역 방송사와 협조한 재난경보체계 구축
- ▶재난 대응·복구를 위한 실질적 민관 협력 네트워크 실현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대응 매뉴얼 현실화
-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협력적 현장지휘체계 강화 방안 마련
- ▶소방공무원 인력기준에 맞는 인력 증원

4. 사람 중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후 변화로 인해 인간 사회에 다가오는 자연재난의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난 현장의 이해관계자인 이재민이나 공공 및 민간의 구조구급 주체들 간의 재난관리 서비스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의 차이로 인한 갈등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사람의 안전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행정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로 은폐되는 위험정보를 공개하여 안전하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세부 정책대안(공약 예시)

- ▶모든 계획과 사업에 안전관리 계획 필수 반영
- ▶재난약자 대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업·산업체의 위험정보 공개 및 지역시민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 ▶재난 발생 후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재난안전평가회의 개최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 ▶재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 자금 대출이자 지원
- ▶재난 피해자, 종사자, 자원봉사자를 위한 트라우마 치료센터 설치

5. 실천 중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의 관련기관과의 상시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각적인 예방 활동에 주력하여야 한다.

■ 세부 정책대안(공약 예시)

-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조례 제정
- ▶학교, 교통, 시설 등 생활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시민안전감시단 운영
- ▶시민들이 참여하는 재난안전경진대회 개최